

대출액 95% 보증에도 저신용자 소외... 방안마련 절실

정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방안
신한·KB국민·우리 등 6곳서 공급
총 재원 10조원... 18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소외불식 어려워” 지적도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 저신용 소상공인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액의 95%를 보증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들은 거래정보가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추후 부실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신청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보증만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의 소외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대출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저신용자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를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로 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한·KB국민·NH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위험을 낮춰 은행의 대출거절 가능성을 낮

(1·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세부 지원구조)

구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지원규모	16.4조원	3.1조원	
대출 공급	지원규모	5.5조원	7.8조원	10조원
	대출창구	시은	기은	소진공
	보증지원	없음	신·기보 지신보(위탁)	지신보 (위탁)
	보증비율	없음	100%	100%
대출 집행	지원대상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
	지원한도/금액	3,000만원	3,000만원 (지신보) 1억원 (신·기보)	1,000만원 (직접대출) 2,000만원 (대리대출)
	지원금리	1.5% 고정금리		
	지원기간 (초저금리 적용기간)	1년	3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금융위원회

추겠다는 의도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한도는 건당 1000만원으로, 은행에서 소상공인이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95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이 950만원을 대신 갚고, 은행은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위험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증비율을 높이는 것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소외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은행의 입장에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부실위험을 떠맡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간 대출 승인비율

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주고객은 1~4등급으로 이들의 경우 예금 대출 등 고객의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쉬워 대출이 쉽지만 거래정보가 부족한 저신용자의 경우 거래 부실위험도 높아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긴급대출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시중은행에 접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한 번에 모든 소상공인 접수가 몰리면 안전한 1~4등급에게 먼저 내주지 않겠냐”며 “우선순위에 밀려 1차때보다 더 오래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 다른



BNK경남은행에서 소상공인이 1.5% 이차보전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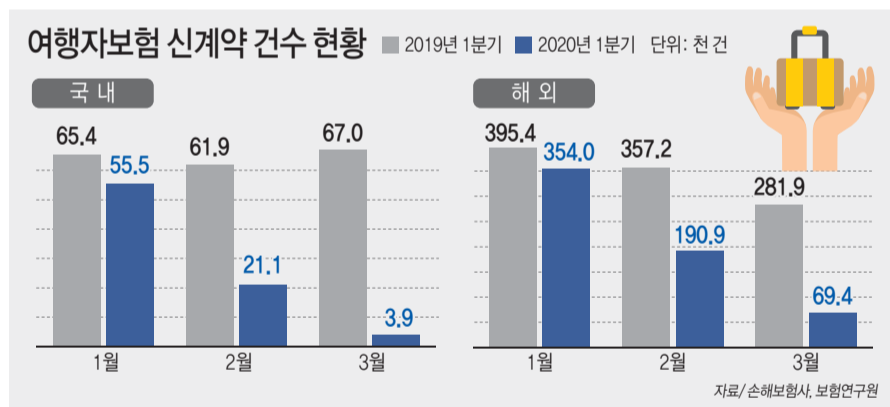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금융 실적을 통해 저신용자도 심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제·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대출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 1000만원의 긴급대출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려한다”며 “연체가 있다면 해결한 뒤 상대적으로 거래정보가 많은 주거래은행에서 긴급대출을 받길 권하겠다”고 말했다.

총 10조원의 재원으로 18일부터 신

청을 받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접수 뒤 25일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금리는 중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연 3~4%다.

한편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중 1~3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다. 3조5000억 원 상당으로 편성된 이차보전대출은 우리은행이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코로나 피해를 많이 접수받은 대구·경북은행은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그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은 다음달 초가 되면 재원이 소진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내 여행자보험 신규계약 43% 급감

보험사, 1분기 코로나19 영향·과제 내국인 해외출국자수 53%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자보험 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여행 취소에 따른 환불·위약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행취소보험 등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0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여행자보험시장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에는 63% 급감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53% 감소했다. 지난 2009년 10월 23.4%가 감소한 이후 두 자리대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1%(2~3월은 59%)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라 해외여행, 국내 속

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수수료) 분쟁은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배 증가했다. 이 중 해외여행(7066건)이 45%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여행국가가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돼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의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라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어 여행 취소에 대한 보장이 불가하다. 일부 판매되던 전염병 보장 상품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지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 서울 등 6곳서 54명

서울 30명, 인천 6명, 충북 2명 등
코로나19 확진자 한달만에 30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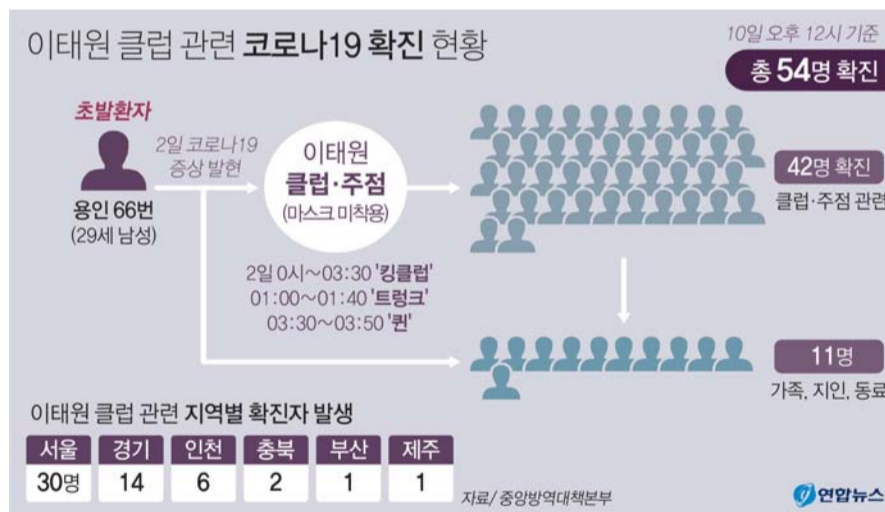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달만에 다시 30명대를 넘어섰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일로에 접어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보다 34명 늘어 총 1만8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34명 중 26명은 국내 지역감염, 나머지 8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에 다시 진입한 건 4월 12일 32명 이후 28일 만이며, 하루 신규확진자 수로는 4월 9일 이후 한달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서울이 그중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이며 부산과 제주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태원을 직접 방문해 감염된 사례가 43명, 접촉을 통해 감염된 2차 전파가 11명이다.

중대본이 파악하는 이태원 방문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한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시는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월 2일에 방문자를 중심으로 1600~1900명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방문자 숫자는 늘어나 현재는 6000에서 700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단은 서울시가 계속 파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문자 연락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일 서울시는 출입자 명부 1946명 중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309명은 불통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이 20~30대 젊은층이라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 본부장은 “54명 환자들 중, 접촉자나 방문자를 검사하다 보니까 무증상으로 진단된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증상하고 상관없이 해당 클럽 방문자 모두 검사를 하도록 해서 무증상 상태에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끔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염력

이 높은 상태에서 클럽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들이 클럽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염력이 있는 시기였는지 중요할 것 같다”며 “확진자들이 증상이 있을 때 클럽을 갔고, 첫 번째 환자는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의 분비량이 상당히 높아,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클럽을 방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진단) 2~3일 지연이 되면 그 사이 또 다른 노출이 일어나고,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며 “지난 4달 동안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신 국민의 노력과 고령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떠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